

2010년 6월 12일 서울시 기출문제

1.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가 아닌 것은?

- ① 허위 기재사실에 의한 공무원임용의 취소
-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 ③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취소
- ④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⑤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의 취소

<답> ① 철회는 성립당시에는 유효·적법하였으나 새로운 사정 때문에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허위 기재사실에 의한 공무원임용은 성립당시의 하자에 해당된다.

2.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행정주체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공무수탁사인의 위치에서 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답> ①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므로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조직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이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④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답> ③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4.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건물의 인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아니다.

- ②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발송한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제3자 집행에서 행정청과 제3자간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에도 그 계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⑤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답> ② 2차, 3차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수정)

- ①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 ②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는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원고적격을 갖는다.
 - ③ 판례는 공개청구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 후 폐기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정답 ①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참고)

- ①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나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3.3.11, 2001두642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9.2.25, 98구3692: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다면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②대판 2003.3..28, 2000두9212
- ③대판 2003.4.25, 2000두7087
- ④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6. 다음 중 판단여지의 구속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결정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물결정
- ③ 공무원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결정
- ④ 보호대상문화재의 대상여부에 대한 평가
- ⑤ 인사평가위원회의 평가

<해설> ③ 공무원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결정은 구속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니고 행정정책적 결정에 해당한다.

<답> ③

7.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급부행정의 영역보다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③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상위법령의 시행의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재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된다.
- 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답> ⑤ 조례는 포괄적 입법이 가능하다.

8. 다음 중 허가과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무출원허가나 수정허가가 가능한 반면,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무출원 인가나 수정인가가 불가하다.
- ㄴ. 허가는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 대상이다
- ㄷ.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 속한다
- ㄹ. 허가는 공법적 효과를 발행하지만 인가는 공·사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 ㅁ.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며 인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답> ② ㄴ. 허가는 위반의 경우, 처벌이나 강제대상이 되지만 유효이고, 인가는 위반의 경우 무효이나 처벌이나 강제 대상은 되지 않는다.

ㅁ.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일 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한다.
-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 발생한다.

-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⑤ 신속을 요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답> ①옳음/ ② 14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피고용인 등 사리분별이 있는자에게 교부한다. ④ 불특정다수인, 수령거절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10. 판례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은?

- ㄱ.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처분
 ㄴ.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
 ㄹ.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ㅁ.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① ㄱ.ㄷ.ㄹ ② ㄱ.ㄴ.ㅁ
 ③ ㄴ.ㄷ.ㄹ ④ ㄴ.ㄹ.ㅁ
 ⑤ ㄷ.ㄹ.ㅁ

<답> ②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

- ① 부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되, 그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②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③ 일정기간까지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기간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기한에 있어서 시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 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 발생시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⑤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답> ③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은 일종의 부담으로 부담부는 부담의 이행여부와 본 처분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12.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수정)

- ①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
 ②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

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으면 장래 동종의 위반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된다고 부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⑤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답> ①

13.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질서위반행위시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한다.

<답>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징수

③ 대집행 ④ 직접강제

⑤ 이행강제금

<답> ①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이 아니다.

15. 다음 중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답> ④ 즉시항고를 하여도 집행부정지다.

16. 다음 중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①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

②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주민

③ 종전에 이용하던 사도의 폐지허가처분에 대해 다른 도로의 이용이 가능해진 주민

- ④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
- 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

<해설>

- ①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0.8.14, 89누7900)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 ③ 타인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대지에 연결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타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12.7, 97누12556)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 ④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기존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것(미원의 ‘그루타민산소-다’)과 같은 품종(제일제당이 수입한 ‘이노신산소-다’)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기존업자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6.29, 69누91)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 ⑤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5.9.26, 94누14544)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등 취소】

<답> ②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 ②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소멸한 날로 14일 이내 제기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제기로 본다.
- 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적용한다.

<답> 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8.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부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답>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19. 다음 취소소송의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제9조(재판관할) ② 제13조(피고적격)
- ③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④ 제20조(제소기간)
- ⑤ 제23조(집행정지)

<답> ④ 무효는 제소기간이 없다.

20. 다음 중 생활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 ②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③ 생활보상은 새로운 생활기반을 재건 할 수 있게 해주는 보상으로 원상회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답> 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2007다8129)